

기획: 기초과학연구진흥 원년 30주년 기념, 한국 기초 과학 정책의 역사

서문

신향숙†

1989년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진흥 원년을 선포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과 우수연구센터 사업 출범 등 기초 과학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본격화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년 노벨상 시즌이 되면 기초 과학에 대한 홀대와 관련 정책의 부재 혹은 문제를 지적하는 글들이 반복되곤 한다. 여러 가지 기초 과학 육성책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에서 기초 과학 정책은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등장하고 추진되어 왔을까? 그러한 정책적 노력의 특징 및 한계는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2019년 12월 “기초과학연구진흥 원년 30주년”을 주제로 한국 근현대과학사 워크숍을 기획하게 되었다.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에서 개최된 이 워크숍에서 1970년대의 한국과학재단, 1980년대의 기초과학연구진흥법, 1990년대의 우수과학연구센터(SRC), 2010년대의 기초과학연구원(IBS), 그리고 전 시기를 포괄하는 기초 과학자의 사례 연구 등이 발표되었고, 매우 흥미로운 논의들이 오고 갔다. 다섯 편의 연구 중 김승현의 우수과학연구센터와 김근배의 기초과학자의 사례 연구는 몇 가지 사정으로 이번 『한국과학사학회지』 기획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다른 논문들의 진척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이번 “기초과학연구진흥 원년 30주년” 기획은 한국과학재단, 기초과학연구진

홍법, 기초과학연구원 등 제도화의 역사를 추적하는 논문들로 꾸며 보았다. 한국에서 특정 분야의 진흥 혹은 육성 정책은 관련법의 제정과 연구소의 설립 등 제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초 과학 정책 역시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의 제정과 한국과학재단과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제도화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우선, 1977년 발족한 한국과학재단의 설립 과정과 초기 사업의 성격 변화를 분석한 강기천의 논문이 실렸다. 대학 육성 및 기초 연구 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은 정부의 기초 과학 정책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사례이자, 현재까지 기초 과학 정책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 과학 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기초 연구비의 변화를 드러내기 위해 한국과학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을 조명해 왔다. 그렇지만 강기천의 논문은 “기초 연구” 개념의 변화를 통해 한국과학재단의 설립과 사업의 성격 변화를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그는 한국과학재단이 설립 당시에는 “기초 연구” 전반에 걸친 지원을 목표로 대학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1980년대 중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목적기초 연구 사업”을 전담하면서 “응용 및 개발”로 확장되고, 1990년대 이후에는 대학이 기초 연구보다는 응용 및 개발 연구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기초 연구”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채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후 “기초 연구” 혹은 “기초 과학”과 관련된 제도나 법을 둘러싼 혼란과 논쟁도 이로 인해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신향숙과 문만용의 논문은 “기초 연구”와 “기초 과학”에 대한 더욱 초점을 맞춰 기초과학육성정책과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등장하는 과정을 살폈다. 해방 직후부터 1989년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제정되기까지 기초 과학자들의 기초 과학 육성 요구와 정부의 관련 정책 변화를 추적하고, 실제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정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 법이 담고 있는 의미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의 제정은 기초 과학자의 요구보다 기초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산업 기술 개발과의 연결을 강조했던 과학기술처의 구상이 더 반영된 결과이며, 그 과정에는 기초 과학의 궁극적 목적을 산업 기술 개발로 설정한 기초 과학자들의 수사도 한 요인이 되었음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범순·우태민·신유정의 논문은 2011년에 설립된 IBS에 활용된 여러 단계의 벤치마킹을 분석했다. 저자들의 기존 연구인 『사회 속의 기초과학: 기초과학연구원과 새로운 지식 생태계』가 IBS의 설립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한 것이라면, 이번 연구는 IBS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던 스위스의 유럽 핵심

자 물리 연구소(CERN),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MPG), 일본의 이화학 연구소(RIKEN)에 주목함으로써 보다 원초적이고 거시적 차원의 논의를 전개했다. 이 논문은 벤치마킹된 기관들이 왜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에 탈맥락화된 상태로 소환되어야 했는지, 은하도시에서 출발한 IBS의 설립 구상이 국내의 어떠한 정치·경제·사회적 맥락 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IBS의 설립에 한국 기초 과학의 역사성과 정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드러냈다.

이상의 세 편의 논문들은 한국 기초 과학 정책의 역사를 제도사적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초 과학과 기초 연구의 개념에 대한 주체 간의 이해 차이와 정치적 차원의 맥락 변화 등이 근본적 동인으로 작용했음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적, 정치적 측면이 실제 기초 과학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한국의 기초 과학은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

So what? 한국 근현대 과학사를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자 벽처럼 느껴졌던 화두였다. 특히, 과학의 제도화나 정책의 등장에 대한 역사적 추적은 비교적 쉽지만, 그 영향이나 결과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제도화나 정책의 영향력을 어떻게 범주화할지도 불분명하지만, 그 효과를 평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기획에 실린 세 편의 논문도 각 기관과 법의 설립과 제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의 전개에 대한 논의는 다소 미진한 편이다. 어찌면 이것이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노벨상 시즌마다 반복되는 기초 과학에 대한 지적과 반성이 반복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이번 기획은 한국의 기초 과학 정책을 이해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싶다. 기초 과학 육성책이 만들어낸 한국의 기초 과학에 대한 입체적인 역사상은 후속 과제로 다루어볼 것을 약속한다.